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 강화로 K-푸드 수출지원 모색

- 식약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개최로 양국 간 규제협력 강화
- 중국 통관 담당공무원, 한국의 식품업체 대상 중국 수출 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12월 10일 알로프트 서울 명동(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중국은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량이 많은 국가(약 448만 톤)
 -[’24년 주요수입국] 중국(17.0%), 호주(16.8%), 미국(15.3%) 등
 -[’24년 주요수출국] 중국(17.8%), 일본(13.4%), 미국(13.2%) 등

중국 해관총서가 참석하는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서 식약처는 ▲양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개정* ▲대중국 수출 숙취해소 음료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 ▲비매품 및 견본에 대한 해외생산기업 등록 면제 등을 제안한다.

- * 기관명 현행화(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해관총서), 우리나라의 식품제조·가공업소로 등록된 경우 중국의 해외생산기업으로 자동 명단등록

중국의 주요 의제는 ▲한중 식품안전 위해정보 교환 협력 강화 ▲’26년 APEC(의장국: 중국) 식품안전협력포럼 초청 등이다

아울러 11일에는 중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통관 담당 공무원이 우리나라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식품 수입 규정을 직접 설명하고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 식품업계가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여 우리 수출 식품의 부적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K-푸드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수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식품안전관리 실무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중국 수출 과정에서 겪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철 (사)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식품 수출 현장에는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회도 식약처와 함께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K-푸드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행사개요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043-719-2023)



☐ **배경**

- 「한·중 식품안전협력약정('03.10.)」 체결에 따라, '04년부터 중국
해관총서와 양국 교대로 개최되는 **국장급* 회의**

* 우리 처 식품안전정책국,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 **일시/장소** : '25.12.9(화)~'25.12.11(목) / 알로프트 서울 명동 등

☐ **참석자**

- (한국)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등 5명
-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부국장 등 5명

☐ **방문일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12.10(수)	스마트 HACCP 적용 업체 방문	인천
	양자 회의	알로프트 서울 명동
12.11(목)	수출 업계 간담회	(사)한국식품산업협회